

지방정부는 지역청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청년정책인가

고학력이 대부분인 청년층에게 만족할 만한 일자리는 부족하며, 그 영향으로 청년층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가고 있는 실정

- 지역청년들은 좋은 일자리의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인구절벽이라는 국가 전체의 시스템을 뒤흔드는 양상으로 이어지는 등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는 결과를 초래

국가는 청년문제 해소를 위해 일자리,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청년정책을 수립·실행해오고 있음

- 청년의 유출 문제는 지역의 전반적인 활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이 확대되고 있음
- 시·도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제정한 조례에 의하면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의미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 지원조직 및 제도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17개 모든 시·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

- 조례의 명칭은 대부분 '청년기본조례'이지만, 예외적으로 광주가 '청년정책기본조례'를, 경남이 '청년발전기본조례'를 사용
- 2015년 1월 서울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는 2018년 2월에 인천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가 제정된 시·도의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개, 2016년 6개, 2017년 5개, 2018년 1개 등으로 나타남
- 시·도별 조례에 규정된 청년 연령의 범위는 개시 연령과 마감 연령이 각각 15, 18, 19세 등과 34, 39세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

시·도별 청년기본조례에서의 청년 연령 비교

연령의 범위				해당 시·도(제정연월)		
부터	까지	15	18 19	34	39	
15	34					• 서울(2015.1.), 울산(2017.4.), 세종(2016.12.), 경기(2015.8.)
	39					• 충북(2016.5.), 경북(2017.12.)
18	34					• 부산(2017.5.), 강원(2017.11.), 충남(2016.2.)
	39					• 전북(2017.4.), 전남(2015.7.)
19	34					• 경남(2016.7.), 제주(2016.6.)
	39					• 대구(2015.12.), 인천(2018.2.), 광주(2015.12.), 대전(2016.10.)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go.kr

청년정책의 분야는 시·도 간에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일반적인 사항과 각 시·도에서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게 추진하는 특별한 사항 등이 있음

- 17개 시·도의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청년정책은 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 확대, 주거 안정,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 보호 등 7개 분야가 일반적인 사항으로 대동소이하게 규정
- 5개 이하의 시·도에서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특별한 사항의 청년정책 분야로는 창업 지원, 부채 경감, 건강권 보장, 복지 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교류 확대 등이 있음
- 다른 시·도와는 차별된 유일한 청년정책의 분야로는, 청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 3월에 신설한 광주의 건강검진 지원이 있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경북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이 있음

시·도별 청년기본조례에서의 정책 분야 비교(2018년 5월 현재)

정책 분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일반 사항																	
• 청년의 참여 확대	○	○	○	○	○	○	○	○	○	○	○	○	○	○	○	○	○
• 청년의 능력 등 개발	○	○	○	○	○	○	○	○	○	○	○	○	○	○	○	○	○
•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	○	○	○	○	○	○	○	○	○	○	○	○	○	○	○	○
•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	○	○	○	○	○	○	○	○	○	○	○	○	○	○	○	○
• 청년의 생활 안정	○	○	○	○	○	○	○	○	○	○	○	○	○	○	○	○	○
• 청년 문화 활성화	○	○	○	○	○	○	○	○	○	○	○	○	○	○	○	○	○
• 청년의 권리 보호	○	○	○	○	○	○	○	○	○	○	○	○	○	○	○	○	○
2. 특별 사항																	
• 청년의 창업 지원	○	○	○	○	○	○	○	○	○	○	○	○	○	○	○	○	○
• 청년의 부채 경감	○	○	○	○	○	○	○	○	○	○	○	○	○	○	○	○	○
• 청년의 건강권 보장 (건강검진 지원)	○	○	○	○	○	○	○	○	○	○	○	○	○	○	○	○	○
• 청년의 복지 증진	○	○	○	○	○	○	○	○	○	○	○	○	○	○	○	○	○
• 청년의 지역 정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	○	○	○	○	○	○	○	○	○	○	○	○	○	○	○	○
• 청년의 교류 확대	○	○	○	○	○	○	○	○	○	○	○	○	○	○	○	○	○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go.kr

일자리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은 전반적인 청년정책은 2015년 이후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영향으로 대부분의 시·도가 2016년부터 청년정책 담당 조직을 설치

- 과 단위의 청년정책 담당 조직을 설치한 시·도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전남 등 모두 6개로서, '청년정책담당관' 또는 '청년정책과'를 두고 있으며 이들 부서에는 1~3개의 팀으로 구성
- 팀 단위의 청년정책 담당 조직을 둔 시·도는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제주 등 모두 7개로, 대부분 '청년정책팀'의 이름으로 존재하며 상위 조직인 실·국은 기획, 자치, 산업, 가족 등 다양한 부서에 편성
- 대부분의 시·도는 전반적인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 업무를 이원화하여 운영

시·도별 청년정책 담당 부서 현황(2018년 5월 현재)

시·도	담당 부서(실·국·본부·과·관·단·팀)	시·도	담당 부서(실·국·본부·과·관·단·팀)
1. 서울	• 서울혁신기획관 - 청년정책담당관 - 청년정책팀, 청년활동지원팀, 청년공간지원팀	8. 세종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저출산정책팀
	• 일자리노동정책관 - 일자리정책담당관 - 청년일자리팀	9. 경기	• 여성가족국 - 아동청소년과 - 청년지원팀 • 일자리노동정책관 - 일자리지원과 - 청년일자리팀
	2. 부산	• 시정혁신본부 - 비전추진단 - 청년정책팀 • 일자리경제본부 - 일자리정책과 - 청년취업지원팀	10. 강원
3. 대구	• 시민행복교육국 - 청년정책과 - 청년정책팀, 청년소통팀, 청년사업팀	11. 충북	• 기획관리실 - 청년정책담당관 - 청년정책팀, 청년일자리팀
	• 일자리경제본부 - 일자리노동정책과 - 일자리지원팀 / 창업진흥과 - 창업정책팀, 산학협력팀	12. 충남	• 미래성장본부 - 미래정책과 - 인구·청년정책팀 • 경제통상실 - 일자리노동정책과 - 청년일자리팀
4. 인천	• 일자리경제국 - 창업지원과 - 청년일자리지원팀 • 여성가족국 - 아동청소년과 - 청년정책팀	13. 전북	• 경제산업국 - 일자리경제정책관 - 청년정책팀
	5. 광주	• 자치행정국 - 청년정책과 -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 일자리경제국 - 일자리정책과 - 청년일자리팀	14. 전남
6. 대전	• 기획조정실 - 청년정책담당관 - 청년정책팀, 청년활동지원팀	15. 경북	• 일자리경제산업실 - 일자리청년정책관 - 청년정책팀, 청년취업지원팀, 청년창업지원팀
	• 과학경제국 - 일자리정책과 - 일자리창출팀	16. 경남	• 기획조정실 - 교육지원담당관 - 서민자녀교육지원팀 • 경제통상국 - 일자리창출과 - 청년일자리팀
7. 울산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인구청년정책팀 • 일자리경제국 - 일자리총괄과 - 창업지원팀, 취업지원팀	17. 제주	• 특별자치행정국 - 평생교육과 - 청년정책팀 • 경제통상실지리국 - 경제일자리정책과 - 일자리지원팀

자료 : 각 시·도 홈페이지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기초지자체 수는 2018년 5월 현재 모두 77개 시·군·구

-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226개 시·군·구 중에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 비율은 34.1%에 불과
- 시·도별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시·군·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저조한 실정이며, 대구와 울산은 조례가 제정된 기초지자체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go.kr

시·도별 청년기본조례 제정 시·군·구 수 현황(2018년 5월 현재)

일자리정책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 청년정책 추진 필요

- 그동안 정부의 청년정책은 곧 '청년일자리 정책'이라고 할 만큼 청년의 고용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
- 정책의 대상으로서 청년은 학교에서 사회로, 즉 교육이나 훈련에서 직업 세계로 이동하는 연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책의 초점이 일자리에 맞춰져 왔음
- 청년이 처한 어려움은 일자리 분야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거, 복지, 문화 등 다른 분야의 문제도 상존하므로, 기존의 일자리정책 중심에서 청년정책의 다각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청년발전을 돕는 청년정책이 추진되어야

모든 시·도는 청년정책의 목적이 청년발전에 있음을 조례에 규정

- 17개 시·도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정책이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임을 조례에 명시
- 부산과 제주를 청년기본조례에 '청년발전'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적 역량이 증대되고 자아가 실현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청년의 역량 증대 및 자아실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청년들이 지역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역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 꿈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정부는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에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창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지역이 나를 키워줬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
- 지역이 자신을 키워줬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청년들은 그 지역을 떠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마음을 가질 것으로 예상

국외 취업 지원의 역할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

- 지역 청년의 국외 취업을 청년층의 지역 유출 문제로 보기보다는, 지역에 대한 충성도를 증진하는 개념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생각해볼 수 있음
- 청년들에게 '가장 자기다운 것이 가장 지역적인 것이고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자아정체성과 지역정체성을 정립시키면서, 지역 청년들이 세계적으로 사고하되 지역에서 꿈을 실현하도록 환경을 조성
- 지방정부가 청년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해외 일자리를 적극 지원한다면, 정책의 수혜자로서 해당 청년은 심리적으로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지역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고민하는 애항심 있는 시민으로 변화할 것으로도 기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고 청년과 기업이 참여하며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상항식·분권형 사업(정부부처합동, 「청년일자리 대책」, 2018년 3월 15일 발표)으로 추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청년정책의 연계가 미흡해 상호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으나, 중앙 및 지방정부의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청년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즉 중앙부처는 '청년일자리 기본유형'을 제시하고, 국가예산 포괄지원 등 마중물 제공과 함께 성과중심 관리체계를 확립
- 지방정부는 지역 민간기업·공동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 일자리 발굴, 청년 매칭·지원 및 밀착 관리 등을 자율적·경쟁적으로 추진

▶ 참고자료 : 김도형·박승규(2017), 「울산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수요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내용문의 : 김도형(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033-769-9896, enscape@krla.re.kr)

지번호 보기 :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지위와 역할 강화 방안(김필두 연구위원) 원문보기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brief@krla.re.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